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The 2021 Outlook for Population Policy

이윤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2020년을 기점으로 주민등록인구의 감소가 시작하였으며,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인구 밀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 구조는 점차 고연령층의 규모가 커지는 ‘항아리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향후 5년간의 인구변동에 대한 대응 정책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근거하여 추진될 것이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 혁신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인구변동에 대한 ‘완화’와 ‘적응’의 균형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으며, 장기적 미래의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각 영역에서의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본 계획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본 계획을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모든 국민의 관심과 모니터링, 적극적 정책에 대한 참여를 통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1. 들어가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5년간 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였다. 2021년부터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기반한 새로운 인구정책의 5년을 출발하였다. 1~3차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반등을 목표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으며 2020년은 0.9명 이하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통계청, 2019; 통계청, 2021). 또한 가까운 미래에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장기간 계속된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우해봉, 한정림, 2018).

과연 이와 같은 인구 변화 속에서 정책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출산율 회복을 최종 목표로 한 지난 정책은 여성을 출산 도구화한 반인권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출산율 회복에도 효과가 없는 정책으로 지적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출산율 회복은 어려우니 그 정책은 포기하고 앞으로 다가올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과연 출생이수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멈추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노력만을 해야 할 것인가?

본 글에서는 급격한 인구변동과 사회 현상 속에서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할 인구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현재의 인구변동 현상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그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기본계획의 출발점에서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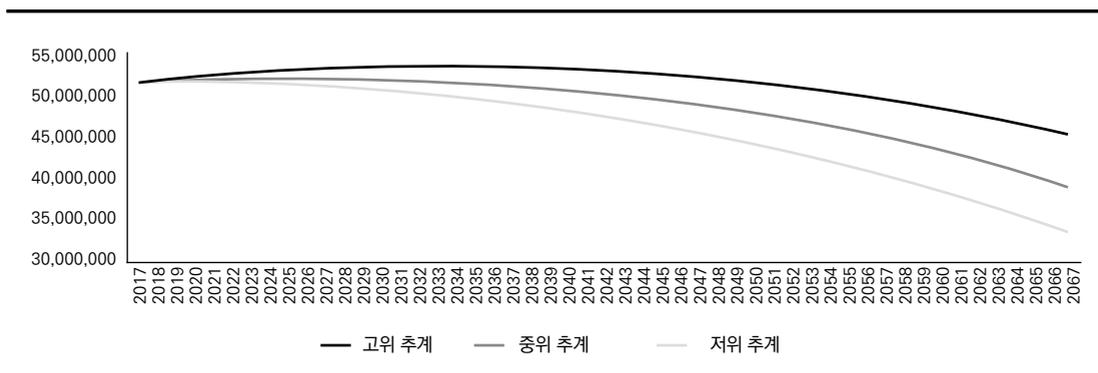
2. 인구변동 동향과 인구정책의 방향

가. 인구변동 동향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829,023명으로 2019년에 비해 20,838명이 감소하여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고 보도되었다. 2020년 출생자수(주민등록)는 30만 명이 붕괴되어 역대 최저치(275,815명)로, 사망자수(주민등록말소자)보다 낮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발생하여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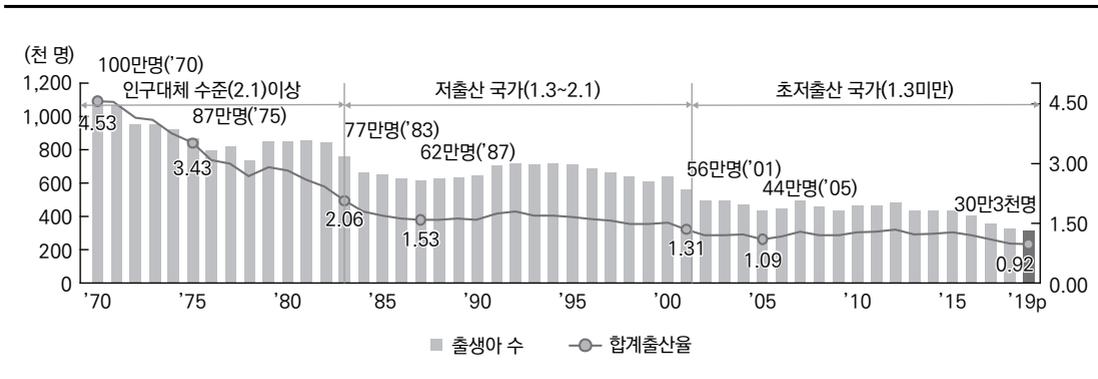
이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저위 가정에 따른 추계와 유사한 결과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인구추계 시나리오별 고위 추계 시나리오에서는 2036년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감소하며,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서는

그림 1. 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총인구수 변화(2017~2067년)



자료: 통계청.(2020). 장래 인구 추계 :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http://kosis.kr/index/index.do>에서 2020.12.24. 인출

그림 2. 연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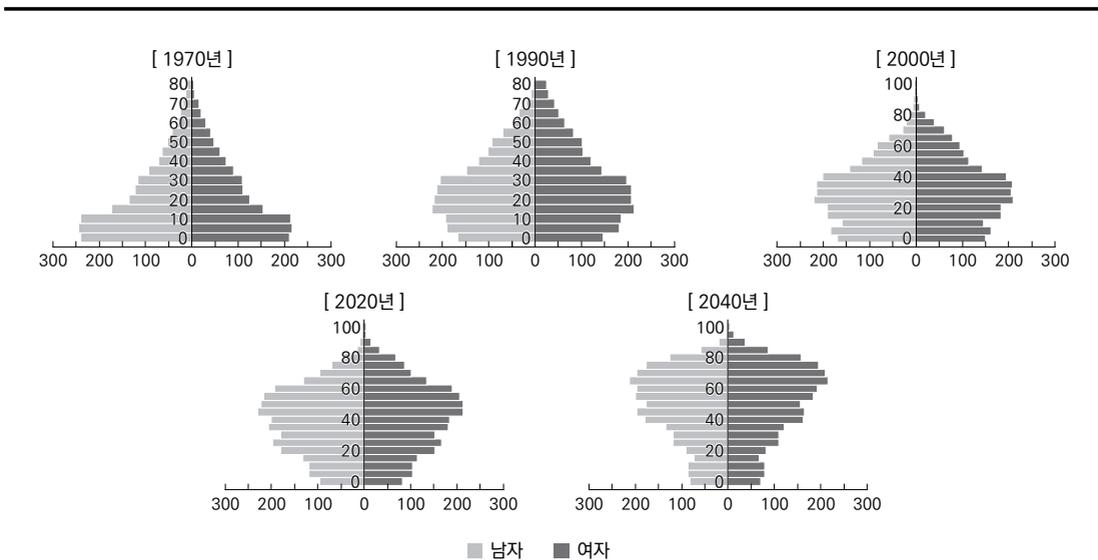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p. 3.

2028년,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서는 2019년으로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통계청, 2019). 2020년 현재 주민등록인구의 인구 감소 결과는 우리나라의 총인구 규모가 저위 추계 시나리오 전

망을 따라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총인구 규모의 감소는 출생아수 감소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출생아수는 2010년 약 470천 명에서 2017년 357천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9년

그림 3. 연도별 인구피라미드 변화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p. 5.

에는 303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합계출산율은 2002년 이후 1.2명 이하로 낮아졌으며 2019년에는 0.92명으로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이하의 국가가 되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0).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는 인구 구성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연령별 인구피라미드는 과거에는 유소년인구의 비중이 높은 삼각형의 모습을 보이지만, 2000년대에 들어 유소년인구는 감소하며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항아리의 모습으로 변화했다. 2020년에는 40~50대 중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40년에는 60~70대 고령층 인구 규모가 커지고 유소년인구가 적은 인구피라미드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인구 구성 변화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고령화율의 변화가 급격히 나타나는 것과 함께 절대적인 고령인구의 규모가 늘

어난다. 2020년 65세 이상 인구는 8,125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15.7%이며, 2025년에는 10,511천 명으로 증가하게 되고, 2040년에는 전체 인구 중 1/3이 65세 이상 인구로 구성된다. 또한 80세 이상 인구는 2020년 1,876천 명에서 2030년 2,977천 명, 2040년에는 5,171천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인구변동에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내 이동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에 따라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2000년대 이후 감소하던 수도권 전입의 규모는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20년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19).

표 1. 인구 고령화 관련 주요 통계

(단위: 천 명, %)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67
총인구(천 명)	51,781	51,905	51,927	51,630	50,855	49,574	47,745	45,406	42,838	40,293	39,294
65세 이상 노인(천 명)	8,125	10,511	12,980	15,237	17,224	18,329	19,007	18,815	18,815	8,570	18,271
- 노인인구 구성비(%)	15.7	20.3	25.0	29.5	33.9	37.0	39.8	41.4	43.9	46.1	46.5
80세 이상 노인(천 명)	1,874	2,441	2,977	3,771	5,171	6,485	7,457	8,134	8,221	8,287	8,140
- 80세 이상 인구 구성비(%)	3.6	4.7	5.7	7.3	10.2	13.1	15.6	17.9	19.2	20.6	20.7
총부양비	38.6	44.8	53.0	64.1	77.5	86.5	95.0	99.4	108.2	117.8	120.2
- 유소년부양비	16.9	15.5	14.7	15.7	17.4	17.6	17.4	16.8	16.7	17.4	17.8
- 노년부양비	21.7	29.3	38.2	48.4	60.1	69.0	77.6	82.6	91.4	100.4	102.4
노령화지수	129.0	189.7	259.6	308.5	345.7	392.8	447.2	492.3	546.1	576.6	574.5

주: 1) 총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이며, 전자는 (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 후자는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으로 산출됨.
 2)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임.
 자료: 통계청. (2020).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2에서 2020. 6. 19.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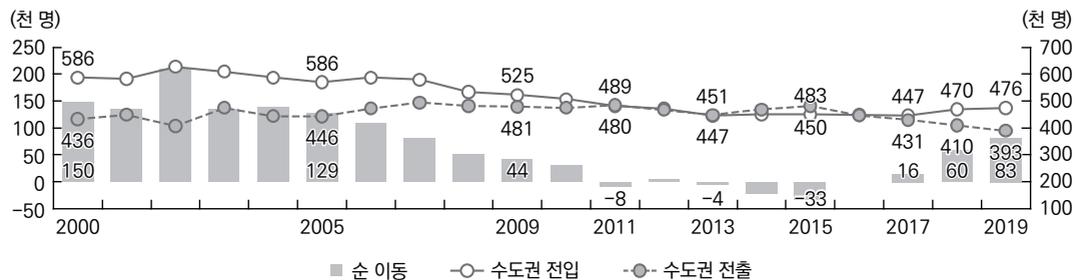
나. 인구변동의 메커니즘과 정책 방향 변화

인구변동이 급격히 일어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의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되었다. 지난 2020년까지 3차에 걸쳐 15년 동안 인구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인구변동의 흐름은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의 낮은 출산 현상에 대한 해석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닌 노동시장과 교육제도, 복지제도 등의 사회 구조 속에서 나타난 비자발적 선택이라는 판단이다(박중서 외, 2020, 발간 예정; 우해봉, 2020). 현재의 낮은 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가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전략을 지향한 결과로 보인다.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제도는 가족, 인간(사람), 삶에 대한 가치를 비롯해 사회 불평등, 고용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인구변동의

요소가 되는 가족 형성과 자녀 출산, 양육 등의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현재의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토대 부족의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이와 같은 사회 구조는 도시 중심으로 인구를 집중시키고, 이는 지역 인구 유출의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며, 저출산과 출생아수 감소는 인구 고령화로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 인구 현상은 다시금 개인과 가족의 삶, 지역 공동체와 사회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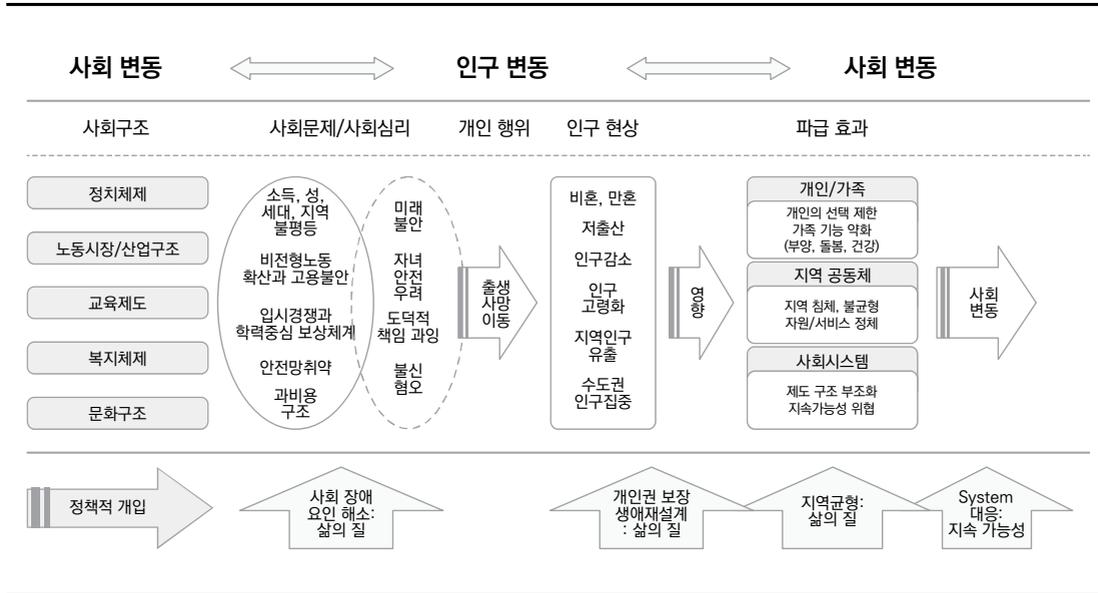
급격한 인구변동에 대응하려면 급격한 변화로 인한 파급효과를 감소시키는 완충적 역할의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정책의 균형이 요구된다. 완화 정책은 인구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출산과 관련된 정책이며, 적응 정책은 변화하는 인구변동에 적절히 적응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인구의 감소와 인구 고령화의 인구변동은 향후 50년 이상은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

그림 4. 수도권 순이동 추이(2000~2019)



자료: 통계청. (2020).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12에서 2020. 6. 19. 인출.

그림 5. 인구변동과 사회변동의 상호작용 과정 이해를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자료: 박중서 외.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간 예정.

며, 이는 올해부터 갑자기 출산율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인구 모멘텀 현상에 의해 출생아수의 급격한 증가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변동에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급격한 인구변동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함과 개인의 자발적인 가족 형성과 확대 욕구를 충족시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찍이 1994년 카이로 국제 인구 회의(ICP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에서는 인구정책의 초점을 '경제성장을 위한 인구 통제'에서 '인권과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였다(우해봉, 2020).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2018)'을 통해 출산 장려 대신 삶

의 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이는 과거 출산에 대한 직접적 보상과 대응 방식의 정책을 지양하고, 앞서 제시한 출산과 양육의 지지적이지 못한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비자발적 출산 포기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2019년에는 범부처 차원으로 구성된 '인구정책 TF'에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2019). 즉, 최근 몇 년간의 인구변동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은 인구 완화와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정책적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1년부터 추진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이와 같은 정책적 기초에서 수립되었다.

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년)의 주요 내용 및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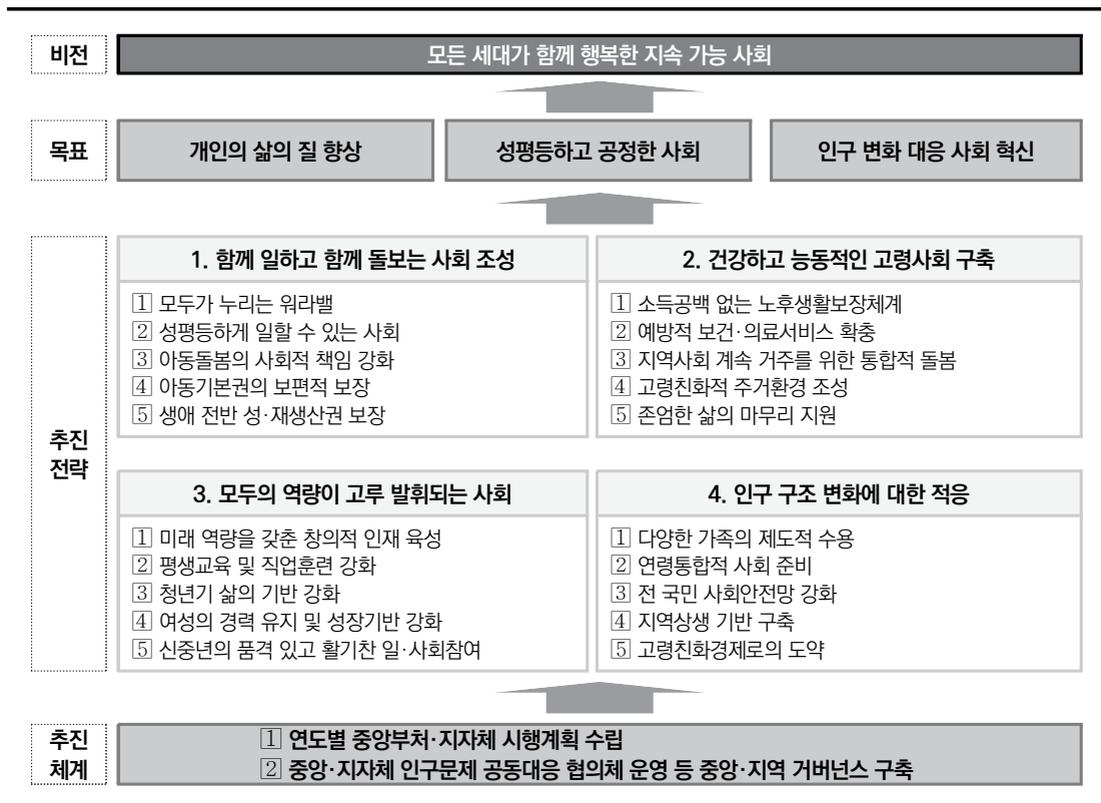
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년)의 주요 내용¹⁾

정부는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새롭게 발표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2018)’에서 제시한 ‘삶의 질’ 중심의 인

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계승하고, 인구변동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완화 정책과 적응 정책의 틀을 따르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로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 혁신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서는 급격한 인구변동에 대

그림 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비전과 추진 전략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주요 내용(요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0. 12. 15. p. 10.

1) 본 내용은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12. 15.)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한 성공적 대응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포용하는 행복을 지향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크게 4가지 영역을 제시한다. 첫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둘째,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셋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넷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응이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은 여성과 남성이 소득 활동과 육아의 역할 분리가 아닌 남녀 누구나 소득 활동과 육아를 함께 하도록 하는 사회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녀 모두의 일-생활 균형(워라벨: work-life balance)을 위한 보편적 육아휴직 확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한 노동권 보장,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아동의 기본권 보장 강화 정책을 제시한다. 이들 정책은 1~3차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서 일-가정 양립과 양육 부담 감소의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정책으로,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는 양육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아동의 권리, 성평등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성·재생산권 보장을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제시하여, 성 건강과 임신·출산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을 제시하였다.

둘째,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은 고령인구 확대에 대한 적응 전략이다. 고령자의 노후 소득, 건강, 돌봄에서의 보장 강화와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기

위한 주거·도시 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령화율이 급속히 높아지며, 고령자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현세대 고령자의 삶의 질 보장과 함께 미래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4차 기본계획에서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여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에 걸친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셋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의 영역은 인구변동에 대한 적응과 완화 정책이 함께 다루어진다.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신증년의 품격 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는 주요 노동 연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역량이 강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적응 정책이다.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를 통한 원활한 사회출발 지원 사업은 청년의 생활의 안정을 통한 결혼과 출산의 선택이 자유롭게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정책으로서 인구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이다.

넷째,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이다. 이는 인구 규모 감소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과 함께 지역별 인구 분포 불균형에 대한 완화 정책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과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 기반 구축,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을 주요하게 구성한다.

나. 기본계획 수립의 함의와 향후 과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지난 15년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인구정책의 여러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15년간 ‘출산율 반등’의 정책 목표를 ‘개인의 인권’, ‘삶의 질’로 전환하여 수립된 첫 번째 기본계획이라는 의미가 있다. 인구정책은 과거와 같이 인구 통제적 관점에서의 추진이 아닌 개개인의 삶의 선택과 권리 보장을 지향하고 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도 이와 같은 지향점을 표방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변화하는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인구정책에서의 성평등 관점의 접목, 인구정책으로서의 성·재생산권 보장,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과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등의 과제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발굴되고 주목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발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보장성 확대와 강화를 눈여겨볼 만하다. 기존 1~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중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하였다. 대표적으로 일정 계층에서만 이용되는 육아휴직제도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확대 개편하였고,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보육 공급 확대, 고령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확대 등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인구변동 현상 중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현상에 새롭게 주목하였다는 측면에서도 함의를 갖는다. 과거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집중하였으며 지역 인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4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역별 인구 불균형,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을 저출산의 원인이자 삶의 질 저하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부터는 4차 기본계획이 현실화되어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안하는 바이다.

4차 기본계획은 인구변동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접근을 포괄하여 노동, 보건과 복지, 경제, 교육, 국방 등의 사회정책 전 영역에 걸친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구변동은 사회 구조적 영향에 의한 산물이기도 하지만, 다시금 인구변동은 사회의 구조와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책보다 다양한 영역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제별로 다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이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육아 병행 가

능한 노동환경 실현' 과제의 사업부처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통계청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많은 기본계획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조율과 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정과 모니터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차 기본계획에서는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장기적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정책과제의 발굴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새로운 정책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은 제시되어 있으나 정책과제의 구체성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향후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관련 부처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정책의 환류 체계에서는 다시금 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정책과제를 구성한 이유에 대해 상기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나가며

인구변동은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에 더욱 파급효과가 강력하고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은 출산율

회복을 통한 완화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미래 인구 감소의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을 고려할 때, 인구 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적응 전략의 동시적 접근이 요구된다. 완화 전략을 통해 인구변동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기대하며, 적응 전략을 통해 인구변동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효과로 전환시킬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앞으로의 5년의 추진과제와 함께 더 나아가 20년 후를 바라보며 수립된 계획이라고 평가된다. 인구변동의 파급효과가 사회 전 영역을 아우르는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과제가 발굴되어 있다. 이는 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판 지점인 '나열식 계획'을 반복했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기존 계획과는 달리 장기적 방향성과 논릿거리를 제안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즉, 현재의 계획은 5년 내에 수행할 수 있는 정책과제와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장기계획을 동시에 담고 있어 정책과제별 수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은 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 정책과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달성하고, 장기적 성격의 과제에서는 관련 부처와 우리 사회가 끈기 있게 논의와 추진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관련 영역이 매우 광범위함을 고려하여 국가의 장기계획으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국토종합계획의 경우 2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세

부적인 계획은 주제와 영역에 따른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인구정책 또한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인구’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으로 변화하였다고 평가된다.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의 성과와 반성에 기반하여 수립된 계획이 성실히 실천되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통계청. (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통계청. (2021). 분기별 합계출산율.(1/4~3/4 분기)
 통계청.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행정안전부. (2021).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보도자료(2021. 1. 4.)

참고문헌

- 박종서 외.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간예정
-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 대한민국정부. (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
-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
- 대한민국정부.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 박종서 외.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간 예정
- 우해봉, 장인수. (2017).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저출산·고령사회정책로드맵. 보도자료(2018. 12. 7.)